

이슈브리프 595호
(2024. 9. 6)

2024 미 대선 대비 EU의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 방향 및 시사점

제595호

김경숙 신안보연구실



국문초록

전 세계가 하반기 가장 큰 이슈인 미국 대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각국은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대중 공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미 대선 결과가 글로벌 정세와 경제, 자국에 미칠 파장과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1기에서 미국과 외교·안보·경제 갈등을 겪은 EU는 트럼프 재선을 우려하면서 안보는 물론 경제안보에 미칠 영향과 그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미 대선 결과에 따라 EU가 직면하게 될 경제안보 리스크는 미중 '전략적 디커플링(strategic decoupling)'의 여파, 미국의 무역보호주의와 관세 중심 수입 규제 강화, 친환경정책 기조의 후퇴 우려 등이다. 이에 EU는 '디리스크링(derisking)'을 위한 전략적 대응책으로 첫째, 관세전쟁에 대한 선 협상 후 맞대응, 둘째, '개방적인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 제고 등 EU의 경쟁력 강화, 셋째, 녹색산업에서 주도권 유지를 위한 혁신과 투자 확대, 넷째, 중국과 '디리스크링'을 하면서도 불공정 무역 관행 저지와 첨단기술 공급망 안정을 위해 단독 대응 또는 미국 등과 공조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미중 전략경쟁 심화로 지정학적 환경과 글로벌 통상 환경이 더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미중 갈등과 미-EU, EU-중국 간 무역 마찰, 관세전쟁은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의 경제에 이중삼중의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미국 대선 동향과 각국의 대응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우리의 경제안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변화하는 환경에 조응해 경제안보 디리스크링 전략을 강화하고 우리 주력산업이나 민감한 분야에 미칠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글로벌 무역 전쟁에 대비해 적극적 산업정책과 핵심기술 보호와 조기 경보시스템 보강 등 경제안보 역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 한국은 EU와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등을 통해 기후, 에너지, 디지털 경제 등 공동 관심사뿐만 아니라 연구 안보를 위한 협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 미국 대선, 트럼프 리스크, EU, 경제안보, 디리스크링, 디커플링, 관세전쟁

전 세계가 하반기 가장 큰 이슈인 미국 대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전당대회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 부통령을 각각 대선 후보로 확정함에 따라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 대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와 해리스 후보가 접전 양상을 보이면서 11월 미 대선 결과를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각국은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 등 미 대선 결과의 불확실성과 대선 결과가 글로벌 정세와 경제, 자국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면서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을 중시한 트럼프 1기에서 미국과 외교·안보·경제 갈등을 겪은 EU는¹⁾ 트럼프 재집권에 대비해 안보는 물론 경제안보에 미칠 영향과 그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하는 가운데 미 대선 결과는 세계정세 및 경제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정강의 경제안보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미 대선 대비 EU의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경제안보 공약 비교

민주당²⁾과 공화당³⁾은 전당대회에 앞서 각각 새로운 정당 강령(Party Platform, 이하 정강)을 공개했다. 정강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선 이후 4년 동안 추진할 정책의 향배를 가늠할 수

1) 트럼프 시기 미-EU 갈등은 김경숙, 『트럼프 시기 미국·유럽 갈등 분석과 향후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보고서 18-18, (2018), pp. 53-93 참조.

2) DNC, 2024 Democratic Party Platform, <https://www.presidency.ucsb.edu/documents/2024-democratic-party-platform> (accessed: August 16, 2024).

3) 공화당의 2024 대선 정강에는 전 미국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인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의 보고서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진정한 의미(The True Meaning of Trump’s MAGA)」와 트럼프 대선 캠프의 공약 「어젠다 47(Agenda 47)」의 내용이 대부분 담겨 있다. Peter Navarro, The True Meaning of Trump’s MAGA: Lessons from the 2022 Republican Red Wave That Never Happened (New York: A Bombardier Books, 2023); www.donaldjtrump.com/agenda47; RNC, 2024 Republican Party Platform: Make America Great Again!, <https://www.presidency.ucsb.edu/documents/2024-republican-party-platform> (accessed: August 1, 2024).

있는 지침서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양당의 정강을 비교해보면, 대중국 정책과 미국 제조업 보호 등 미국 우선주의 정책 방향은 비슷하지만, 경제·외교·안보 분야에서 전략과 접근방법에서 차이를 보였다.

우선, 양당의 전반적인 경제·통상정책을 살펴보면,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의 입장은 확연하게 다르다. 민주당은 ‘기회 경제’를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와 중산층 지원 확대를 통한 경제안보와 안정에, 공화당은 안보를 통한 경제 안정을 중시하고 있다.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란 선거 구호를 다시 내건 공화당은 글로벌 혼란을 종식해 인플레이션과 물가를 안정시키고 미국 제조업자 우선, 포괄적 감세, 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인 무역에 방점을 두고 있다.

둘째, 무역·통상 분야에서 양당은 대중국 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대응 전략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을 완화하는 ‘디리스크잉(derisking)’ 노선을, 공화당은 중국으로부터의 ‘전략적 독립’ 즉 ‘전략적 디커플링(strategic decoupling)’을 천명했다. 민주당은 정강에 통상 관련 구체적인 정책 제시 없이 정강 9장에서 동맹·다자협력 등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동맹과 협력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대중 수출 및 접근 제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대중 관세를 인상하고, 필요하다면 중국과도 AI 가이드라인 등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미국 우선주의와 엄격한 상호주의 기조로 중국의 최혜국대우 지위(MFN) 철회, 전자제품, 철강, 의약품 등 중국산 필수품 수입의 단계적 중단, 중국인의 미국 부동산과 기업 구매 금지, 중국산 차량 수입 금지, 수출통제 범위 확대 등 무역·투자 분야에서 강력한 규제를 시사하였다.

공화당은 불공정 무역 개선을 위해 10%의 보편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s) 부과와 트럼프 상호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 제정(정강 5장)을 강조했다.

셋째, 환경 정책 특히 기후·에너지 정책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가장 대조를 보이는 분야다. 민주당은 청정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 미국산 저탄소 자재 사용 의무화(Buy Clean and Buy American) 등 친환경정책 기조를 제시(정강 4장)하였다. 반면, 공화당은 에너지 독립국, 초강대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석유·가스·원자력 생산 활성화 등 저비용 에너지를 증대(1장)하고, 에너지 생산 허가 절차 간소화(3장), 미국 자동차산업 부활을 위한 규제 철폐,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관련 의무 조치(인플레이션감축법, IRA)⁴⁾ 무효화와 중국산 차량 수입 금지(5장)를 명시했다.

주목할 것은 공화당 정강에는 트럼프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 부과나 첨단 분야에 대한 대중 통제 등의 내용은 빠져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핵심 첨단 기술과 공급망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을 추구한다는 점에 미뤄볼 때, 공화당 정강에서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 우선주의 2.0과 전략적 디커플링 차원에서 대중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트럼프 후보가 직접 언급했던 IRA 보조금 문제 역시 공화당 정강에는 빠져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대응 및 전기차 육성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도 표를 의식해 IRA 보조금 철폐를 공식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⁵⁾ 그러나, 2020년 대선 당시 공화당 정강에서 언급한 청정 에너지 개발 촉진 내용이 빠졌다는 점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4) 2030년까지 미국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까지 감축하고 청정에너지와 기후기술 산업에 10년간 3,690억 달러(약 491조원)를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5) 2022년 8월 IRA 통과 직후 미 전역에서 200개 이상의 신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가 발표되었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 몰려있다. 미국 비영리단체 클라이밋파워(Climate Power) 보고서에 따르면, 청정에너지 관련 신규 일자리 17만여 개가 창출되었다.

친환경 정책 기조의 약화는 분명해 보인다.

EU 경제안보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

미국은 EU의 가장 큰 무역 국가(2023년 EU 수출의 5분의 1)이자 투자 대상국(전체 투자의 50% 이상)이며, 나토(NATO) 유럽 회원국들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다. 따라서 차기 미국 행정부의 경제통상 및 외교·안보 정책은 유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맹도 경쟁자, 거래 관계로 인식하는 트럼프 1기 당시 EU는 미국과 극심한 무역 갈등을 겪었다. 미국과 EU는 에어버스-보잉 보조금 분쟁을 겪으면서 상호 보복관세로 맞대응했고, 철강·자동차·디지털세 등 다양한 분야로 무역분쟁이 확대되었다. 유럽 매체들은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미국-EU 간 무역 마찰이 재연될 것으로 예측했다.⁶⁾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할 경우, EU의 경제안보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는 첫째, 중국과의 전략적 디커플링의 여파이다. 경제안보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트럼프의 선거캠프 공약들이 공화당 정강에 상당히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트럼프 2기는 1기에 비해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과 전략적 디커플링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안보를 내세운 미국의 미중 디커플링 시도는 중국의 위협감소 즉, 디리스킹을 추구하는 EU를 압박할 것이다.⁷⁾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50% 관세 부과 방침과 같이 역내 시장경쟁 왜곡에 대해서는 중국에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⁸⁾ 여기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자동차, 농산물 등 EU산 제품에

6) https://news.sbs.co.kr/amp/news.amp?news_id=N1007725070

7) EU의 디리스킹에 대해서는 김경숙, 「EU의 공급망 디리스킹(de-risking) 전략과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전략보고」 통권 278호 (2024. 7) 참조.

8)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discloses to interested parties draft definitive findings of antisubsidy investigation into imports of battery electric vehicles from China,” Press release, August 20, 2024.

대해 보복 대응에 나서면서 EU는 미국은 물론 중국과도 무역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의 일방적 결정과 위협,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로 중국 상품의 EU 유입 우려, 중국의 경제 강압 등은 EU의 경제안보에 예측할 수 없는 위협을 초래할 것이다. 게다가 중국 자동차 시장에 공을 들여온 독일과 스웨덴, 중국 투자에 의존하는 헝가리 등의 반발로 대중 고율 관세에 27개 회원국의 합의를 끌어내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둘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중심 수입 규제 강화이다. 미국은 동맹 및 우방국과의 관계도 거래적 관점에서 경제이익에 따라 재조정할 것이다.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와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고 트럼프 상호무역법을 제정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인 EU⁹⁾의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EU 경제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현재 2025년까지 중단된 EU산 철강(25%)과 알루미늄(10%)에 대해 미국이 관세를 재부과할 경우, 에너지 집약적 상품에 대한 EU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더 감소할 것이다. 트럼프 1기에서 위협했지만 실제로 부과되지 않았던 EU산 자동차 수입에 대한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EU 자동차 제조업체는 취약해질 것이다. 특히 트럼프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책임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독일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다. EU에 대한 압박으로 회원국들의 연대가 약화되면 EU의 단일시장도 흔들릴 것이다.

셋째, 친환경 정책의 약화 또는 폐지이다. 트럼프 2기에서 저비용 에너지 증대, 각종 환경규제 폐지와 IRA 약화 또는 폐지는 EU의 전기 자동차 등 친환경 산업을 타격을 줄 것이며, 트럼프의 파리 협정 재탈퇴가 현실화할 경우, 전 세계 녹색 전환과 기후변화

9) 미국의 EU에 대한 무역 적자 규모는 3년 연속 2천억 달러(약 267조원)를 상회하고 있다.

대응 노력을 위태롭게 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관세가 부과될 EU의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 역시 미국과 EU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공급망의 불안정 심화 우려이다. EU는 바이든 행정부와 EU-US 무역 및 기술 위원회(TTC),¹⁰⁾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기술에 필요한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협력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2기에서는 TTC가 폐기되거나¹¹⁾ EU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의 지배력 약화를 위한 미국과 EU의 협력도 공유 가치가 아니라 거래적 기반에서 달성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해리스가 당선되더라도 미-EU 관계가 경제, 무역, 투자, 기술 분야에서 트럼프 2기만큼이나 힘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주미 독일 대사이자 전 독일 뮌헨안보회의(MSC) 의장인 볼프강 이싱거(Wolfgang Ischinger)는 해리스 당선에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¹²⁾

EU의 ‘디리스팅’을 위한 전략적 대응책

EU 차원은 물론 독일 등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미국 대선

10)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EU는 미-EU 무역기술위원회(TTC, Trade and Technology Council)를 신설(2021.6)해 공유 가치를 기반으로 양자 간 무역 및 경제 관계를 심화하고 수출통제, 외국인 직접 투자 심사, 안전한 공급망(특히 반도체 관련),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을 포함한 기술 표준, 세계 무역의 과제 등 5대 핵심 분야에 대한 협력에 합의했다. 2024년 8월 현재 제6차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였다. European Commission, EU-US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https://commission.europa.eu/strategy-and-policy/priorities-2019-2024/stronger-europe-world/eu-us-trade-and-technology-council_en

11) Inside U.S. Trade's World Trade Online, "Raimondo hopes industry, civil society push for TTC's survival," January 31, 2024.

12) Wolfgang Ischinger, "To Whom It May Concern: America and Europe Need Each Other," *The New York Times*, August 25, 2024, <https://www.nytimes.com/2024/08/25/opinion/international-world/america-europe-trans-atlantic-alliance.html?pgtype=Article&action=click&module=RelatedLinks> (accessed: August 26, 2024).

결과에 대비해 영향 평가 등 전담 대응팀을 공식·비공식으로 가동하고 있다.¹³⁾ 연임에 성공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EU가 불안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선택의 갈림길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하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더 강력한 유럽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¹⁴⁾ 국제질서에서 미국의 역할이 재설정될지도 모르는 격동의 시대에 EU는 전 세계와 EU를 위해 ‘규칙 제정자(rule setter)’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이다.

EU의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책은 첫째, 관세전쟁에 대한 선 협상 후 맞대응이다. 트럼프 2기에서 EU산 제품에 대해 보편관세를 부과할 것에 대비해 먼저 미-EU TTC 등을 통해 협상하되, 만약 협상이 실패한다면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EU의 전담 대응팀이 관세 부과 대상 수입품 목록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EU와 개별 회원국을 겨냥한 보편관세 부과 등 강압 조치에 대응 수단으로 기후통상, 디지털 규제와 경제안보 관련 법을 근거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EU는 트럼프 1기의 교훈으로 제3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도구를 적극적으로 마련했다. EU는 경제적 강압 대응 조치(ACI) 규정, 외국인투자 심사제도(FDI screening), 역외보조금규정(FSR),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공급망실사법(CSDDD) 등과 같은 강화된 환경·인권·노동 가치 규정과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 등 디지털 규정이 대표적이다. EU는 이러한 정책수단을 통해 외부의 경제적 강압 위협에 대응하고, 역내 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 보조금 확대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보호와 대응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13) “EU sets up team to prepare for Donald Trump’s potential return to power,” *Financial Times*, August 1, 2024, <https://www.ft.com/content/cb4b8094-c6fe-4db9-b249-774f635c1b60> (accessed: August 16, 2024).

14) Ursula von der Leyen, *Europe’s Choice Political: Guidelines For The Next European Commission 2024-2029*, European Commission.

EU가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 디지털서비스세(DST)를 부과할 경우, 미국이 자국 기업에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보복 대응 차원에서 무역법 301조 발동으로 맞보복할 것이고 이에 따라 양자 간 무역 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둘째, EU의 경쟁력 강화이다. ‘개방적인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을 추구하는 EU는 역내 번영과 산업경쟁력 강화, 투자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EU는 통합된 경제 안보 전략과 적극적 산업정책 및 보조금 등 이행 조치들을 통해 첨단 반도체 개발, 중요 광물의 역내 채굴 촉진, 친환경 공급망 개선에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¹⁵⁾ EU는 새로운 EU 집행위를 중심으로 녹색·디지털 쌍둥이 전환과 전략산업의 육성·규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다.

셋째, 탈탄소화와 청정기술을 포함한 녹색산업에서 기술 주도권을 유지할 것이다. 폰테어라이엔 위원장 2기의 새로운 EU 집행 위원회는 새로운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 패키지 입법 등 인프라, 청정기술과 재생에너지에 투자와 혁신을 통해 대러 에너지 의존을 줄이고 역내 내재화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넷째, EU는 중국과 ‘디리스킹’을 하면서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저지를 위해 단독 조치나 미국, 우방국과 협력해 대응할 것이다. 이미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50%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는데 앞으로 중국의 공급 과잉이나 기술 탈취 등에 대해 수출통제, 제재 등 관련 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중국의 희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통제 등 보복 조치에 대비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FTA 체결 확대 등 다변화, 관심을 공유하는 우방국, 다자협약체와 협력을 강화할

15) 김경숙, 「EU의 공급망 디리스킹(de-risking) 전략과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전략보고」 통권 278호 (2024. 7), p.13.

것이다. 유럽 내 극우 강경파들의 득세로 회원국들의 분열(특히 동-서유럽) 가능성도 있으나 트럼프의 복귀가 영국 등 유럽 협력을 강화하는 추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¹⁶⁾

시사점과 정책적 고려사항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에 대한 공세가 더 강경해질 것이고, 미중 전략경쟁 심화로 지정학적 환경과 글로벌 통상환경이 더 엄중해질 것이다. 경제안보에 미치는 미 대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EU가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인 트럼프 재선에 상·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는 경우이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한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약화 또는 폐기되고 동맹·우방국과 무역관계 재조정 압박도 거세질 것이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의회 권력 구조가 민주당(상원), 공화당(하원)으로 권력이 분점될 경우,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대중 공세는 거세질 것이나 외교 및 통상정책 공약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EU에 관세를 부과하고 EU가 미국에 보복 관세로 맞대응한다면,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여 두 경제 모두가 타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는 물가상승률이 0.1%포인트 상승하면 GDP가 약 1% 정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¹⁷⁾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1기의 보호주의 정책이 무역 수지 개선에 별 효과 없이 자국민에게 피해를 줬고 타국의 보복과 동맹 관계 약화를 초래했다고 비판('23.11.2.)¹⁸⁾했다.

16) Mark Leonard, Constanze Stelzenmuller, Nathalie Tocci, Carl Bildt, Robin Niblett, Radoslaw Sikorski, Guntram Wolff, Bilahari Kausikan, and Ivan Krastev, "Europe Alone: Nine thinkers on the continent's future without America's embrace," *Foreign Policy*, July 1, 2024, By <https://foreignpolicy.com/2024/07/01/europe-us-nato-russia-war-geopolitics/> (accessed: July 15, 2024).

17) <https://m.edaily.co.kr/amp/read?newsId=03470246638955176&mediaCodeNo=257> (검색일 : 2024년 8월 20일).

18) 유지영. "24년 美 대선 공화당 집권 시 경제안보 정책 전망," 경제안보리뷰 23-20호, 2023.11.15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미국 대선과 의회 선거 결과가 우리의 경제안보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이로 인한 미중 갈등과 미-EU, EU-중국 간 무역 마찰, 관세전쟁은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의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설사, 관세 확대, 수출통제, 수입 제한과 제재 대상이 중국이라고 하더라도¹⁹⁾ 그 여파는 동맹국과 우방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미칠 것이다. 따라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미국 대선 동향과 각국의 대응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우리의 경제안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변화하는 환경에 조응해 경제안보 디리스킹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당선 시 중국과 전략적 디커플링으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더 확대되고 EU 역시 환경·인권·노동 문제를 내세워 탄소집중 무역에 대한 규제 등 보호무역 강화가 우려된다. 트럼프 1기에 비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증가한 만큼 우리 주력산업 분야에 고율 관세나 수출 쿼터 등 전방위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트럼프 2기에서는 경제안보 관점에서 대외무역 관련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역할을 강화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적대국으로부터의 위협 대응, 수출 통제 등 관련 역할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국과 글로벌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민관협력을 통해 철강 및 에너지, 반도체,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우리 주력산업이나 민감한 분야에 미칠 위협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 공화당 내 주요 인사 및 그룹과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대미 의회 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19) 피터 나바로는 그의 보고서에서 트럼프 진영의 대외정책 기조가 경제민족주의(Populist Economic Nationalism)라고 주장한다. Peter Navarro, *The True Meaning of Trump's MAGA: Lessons from the 2022 Republican Red Wave That Never Happened* (New York: A Bombardier Books, 2023).

둘째, 글로벌 무역 전쟁에 대비해 적극적 산업정책과 핵심기술 보호, 제2의 반도체 전략 등 전략적 성장동력 창출로 우리의 경제안보 역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정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변화 등 공급망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술 보호와 유출 방지를 위해 방첩 등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핵심기술의 공급망 감시와 취약성 보완 등을 통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보강하고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과 집단 회복력(collective resilience)을 위해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 파트너십(MSP) 등 다자협의체, 동맹과 우방국 등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ries)들과 국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EU와 준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EU의 연구 지원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등을 통해 기후, 에너지, 디지털 경제 등 공동 관심사뿐만 아니라 연구 안보를 위한 협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